

국힘, 채상병특검법 논의... 여야 합의 처리하나

민주, '제보공작 의혹' 수용 제3차 추천방식도 받아들여 국힘, 당내 비공식 논의 진행 한지아 "신랄하게 토론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 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여당 내에서도 관련 논의에 들어가면서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3차 추천 방식의 이른바 한동훈식 특검을 수용할 수 있고, 당내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제보공작 수사 포함 특검'을 받아들여자는 장경태 의원 입장을

전하며 "장 의원이 (제보공작 의혹) 당사자로 국민의힘 공격을 받는 대상 의원인데 장 의원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원한다면 본인도 수사하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재적 한계를 뚫고 나라를 지키던 스무살 청년의 죽음 진실을 밝히고 수사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면 어떤 제안도 받을 수 있다"며 "진실을 밝힌다는 대전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관련된 제보공작 의혹) 부분도 (특검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비슷한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제보공작 의혹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더 이상 채상병 사건 수사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한 대표는 제3차 추천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검은 자신은 물론 '멋진해병' 단체방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 등 5명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당연히 제보 공작 의혹을 처음 제기한 권성동 의원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3차 추천 방식에 이어 제보공작 수사 제안까지 받아들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을 앞두고, 당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주요 의제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당 내에서도 한 대

표가 제안한 제3차 추천 특검법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추가 논의가 있나'라는 질문에 "한 대표가 틈 나는대로 여러 의원들과 대화하실 계획이 있을 때 말씀들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지난 관훈토론 때 말씀드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이상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제3차 추천 특검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당론으로 특검법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특검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수사와 관계없이 제3차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던 한동훈 대표는 "현재 입장이 달라진 것 없다"면서도 "여러 의견을 논의 중이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대표 특검안으로 민주당과 논의하자는 것이 당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다.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는 있다"며 "그걸 청취하고 있고, 반영해서 안을 낼 것이고, 신랄하게 그 안에서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는) 굉장히 유연한 분이요, 지금으로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면서도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국혁신당 "영광·곡성 재선거 당력 총결집"

29~30일 국회의원 워크숍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영광·곡성 재선거를 앞두고 당력을 총결집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9~30일 영광과 곡성에서 1박 2일 동안 국회의원 워크숍을 갖는다고 밝혔다.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의원 워크숍은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전남에 당의 깃발을 꽂겠다는 의지를 모아 추진됐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앞으로 영광과 곡성에서 최고위원회도 열고, 상당기간 머물며 민심을 살피고 당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 영광

·곡성 재선거와 관련 "호남 주민들은 30년 동안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지역발전적 임자가 누구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왔다"며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영광과 곡성에서 각각 39%의 비례 득표율을 얻어 40~41%대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과 근소한 격차를 보였다.

당내에선 이번 재선거 역시 '해발만 하다'는 자신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 손경수 예비역 공군 대령이 곡성 군수에, 정광일 조국혁신당 재외동포특별위원장과 오만평 전 경기도의원, 정원식 항일여성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연구소장이 영광군수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산 무안군수·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복당

당내 경선에 반발해 탈당했거나 공천권이 박탈된 전남 지역 현직 단체장들이 2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신분인 김산 무안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의 복당을 결정했다. 이들은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도와 중앙당 당원 자격심사 결과 나란히 복당이 허용됐다.

김 군수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무안군수 후보 경선에서 공천이 배제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 군수는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이승욱 후보를 누르고 공천장을 받았으나 선거 전 금품제공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변복되자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해 군수직에 올랐었다.

김 군수와 강 군수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적용 대상자로 분류돼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부적격 심사와 감산 예외 조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남 지역 단체장은 모두 6명이다. 김 군수와 강 군수에 앞서 정인화 광양시장 이 지난 6월 10년만에 복당됐다.

현재 전남 무소속 단체장은 박홍률 목포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김희수 진도군수 등 3명만 남게 됐다.

오지현 기자

조인철 "근로자 3년 육아 휴직" 법안 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사진)은 20일 근로자의 기존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



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조 의원은 "부모가 육아와 일자리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지 않게 사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김찬수(왼쪽)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전 영동포경철서장)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뉴스스

여야, 첫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

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뼈대로 했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임차료 지급과 전세임대 방안을 받아들여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귀순 시의원 '5대 문화권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시의회는 이귀순(사진) 의원이 22일 오후 3시 예결특위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문화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뜰레 관련 조성 사업 4대 전략 중 '5대 문화권' 조성에 집중을 위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권'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

안을 모색한다.

정성구 대표(UCL도시콘텐츠연구소)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권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김광욱 실장(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문화권의 현실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누구나 토론회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법적 근거를 두고 예산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사업"이라며 "5대 문화권" 조성에 집중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